

광역경제권별 도시인구이동 추이 분석과 지역경쟁력에 대한 시사점

김 동 수

(부연구위원 · 지역발전연구센터)
kim.dongsoo@kiet.re.kr

〈요 약〉

참여정부 이후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한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개별 광역경제권 단위의 발전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광역경제권 간 인구이동과 광역경제권 내 광역도시통계권 간 인구이동을 분석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경쟁력과 변화를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7개 광역경제권 중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반면, 호남권과 대경권 그리고 동남권의 경우는 경쟁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경권과 동남권의 경쟁력 하락은 광역경제권 내 발전거점 광역도시통계권들의 인구유출과 인적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이동 특히 고급인적자원의 지역 간 순환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요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서론

세계적으로 지역정책의 목표가 지역 간 격차 완화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이후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경쟁력

을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이루고자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들을 모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역의 역할 분담 형식으로 지역정책을 추구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근 현 정부에서는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한 지방분권의 추진으

로 개별 광역경제권 단위의 발전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경쟁력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경쟁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리변수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다. 이는 지역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개방경제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역정책의 공간단위가 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을 위주로 2000년 이후 광역경제권 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광역경제권 간 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각 광역경제권 내의 실질적 도시개념이라 할 수 있는 광역도시통계권의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변화를 설명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의 시·군·구 간 인구이동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경제권 간 그리고 광역도시통계권 간 인구이동으로 재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인구이동에 제약이 없는 개방경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이동 요

인을 지역경쟁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동수 외(2009)¹⁾가 200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경제권 간 그리고 광역도시통계권 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동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2005년 현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서울광역도시통계권으로의 고급인적자원의 집중 정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일자리와 인구 규모의 상호 인과관계를 밝혀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가 인구이동을 유인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들어 산업정책이 일반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정책에 우선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인구의 규모 또는 인구이동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김동수 외(2008)²⁾는 미국의 표준광역도시통계권(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SMSA)과 유사하게 통근패턴을 이용하여 실질적 경제적 개념의 도시라 할 수 있는 광역도시통계권을 정의하여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동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한 단년분석

1) 김동수·장재홍·이두희(2009),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제544호, 산업연구원.

2) 김동수·허문구·이두희(2008), 「광역도시통계권 설정을 통한 지역경제 분석 : 도시공간구조와 지역경쟁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제530호, 산업연구원.

에 그쳐 이동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적자원의 유출(Brain Drain)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역 간 인구이동을 다룬 선행연구에는 송하중 외(2004)³⁾가 있다. 이들은 두뇌유출이라기보다 고급인력 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인식하여 인력의 상호교류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기를 주장하였다. 권상철(2001)⁴⁾은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부각시켰고, 임정덕·장영재(1997)⁵⁾는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한 고교생들이 서울로 대학진학 및 취업 이후 회귀하지 않는 것을 들어 지역 간 격차 완화의 원천적 한계를 설명하였다.

3. 광역경제권 간 인구이동 추이 현황 분석

이 장에서는 인구이동 현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광역경제권 간 인구이동의 추이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각 광역경제권 내의 광역도시통계권의 인구이동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인

구이동의 추이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인구이동 자료를 광역경제권과 광역도시통계권으로 재정리하였으며, 광역경제권의 경우는 7개, 광역도시통계권의 경우는 김동수 외(2008)가 정의한 50개의 통근유형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도시권을 이용하였다.

(1) 광역경제권 간 인구이동 추이분석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의 광역경제권 간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2002년을 정점으로 인구순유입 규모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충청권과 더불어 인구의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는 인구의 순유출을 보이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인구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된 이유로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과 천안·아산 지역과 당진지역의 산업 발전 및 비수도권지역으로의 기업이전정책의 혜택 등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5개의

3) 송하중·양기근·강창민(2004),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 순환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2호, pp. 145~173.

4) 권상철(2001),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uman Capital Drain in Korea”,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4권 제1호, pp. 67~79.

5) 임정덕·장영재(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제20권 1호, pp. 91~115.

〈표 1〉 연도별 광역경제권별 인구 순유입 규모

단위 : 명

순유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도권	146,013	136,115	209,591	136,904	140,336	128,809	111,700	82,938
충청권	-4,149	-13,316	-13,272	2,427	31,782	3,501	11,120	18,007
호남권	-56,427	-38,456	-98,532	-48,829	-86,369	-51,817	-46,577	-31,590
대경권	-29,784	-35,538	-40,919	-39,889	-40,248	-36,467	-28,978	-31,156
동남권	-51,135	-40,366	-39,921	-36,103	-37,076	-31,748	-35,803	-29,125
강원권	-11,392	-8,113	-17,181	-13,063	-8,342	-11,473	-9,560	-6,146
제주권	6,874	-326	234	-1,447	-83	-805	-1,902	-2,928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은 꾸준히 인구의 순유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호남권과 동남권은 그 규모가 다소 줄어든 반면, 대경권은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경권 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약 3만 1,000명에 이르고 있어 오히려 2만 9,000여명의 동남권 인구 순유출을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동남권과 대경권의 인구가 각각 763만명, 507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대경권의 인구유출 규모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순유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호남권의 인구 순유출 규모 또한 2007년 현재 3만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호남권의 인구는 2005년 약 502만명 수준이었으며, 〈표 1〉에서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의 순유출규모는 약 46만명

으로 2005년 인구대비 약 9.13%의 인구유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을 제외한 전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하나는 2002년과 2003년이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비수도권의 인구 순유출 규모와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는 점이다.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유출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구이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이동일 뿐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의 규모는 비록 인접지역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2〉에서 살펴보면, 각 칸

〈표 2〉

2007년 광역경제권 간 인구 이동 규모

단위 : 명

유출 \ 유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수도권	4,383,091	166,206	116,532	60,242	82,798	58,258	11,556
충청권	161,727	641,606	23,883	16,018	18,039	10,863	1,583
호남권	145,060	27,342	733,885	6,653	17,822	4,423	2,646
대경권	83,678	20,316	6,892	641,447	51,631	6,526	1,444
동남권	110,639	22,140	18,101	48,908	1,020,170	6,563	3,864
강원권	63,643	12,352	3,976	6,034	6,735	158,066	522
제주권	13,783	1,764	2,972	1,476	4,065	483	61,679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의 숫자는 행(row)의 광역경제권에서 열(column)의 광역경제권으로 이동한 인구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2007년 약 14만 5,000명에 이르는 반면 수도권에서 호남권으로 이동한 수는 약 11만 6,500명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외에 호남권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역시 수도권이었으며 인접지역인 충청권이나 대경권으로 유출된 인구는 각각 약 2만 7,000명과 6,7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2) 광역경제권 내 광역도시통계권의 인구이동 추이분석

이 절에서는 각 광역경제권별로 실

질적 도시의 개념인 광역도시통계권의 인구이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권, 인천, 수원-화성-오산권, 평택-안성권, 안산-시흥권, 이천, 그리고 동두천 광역도시통계권으로 모두 7개가 있으며, 이 중 서울권의 절대적 인구집중은 여전하지만 2003년 인구 순유입 규모가 약 8만 3,000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완화되고 있어 2007년에는 922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서울에 인접한 수원-화성-오산권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2007년 5만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누적 순유입인구가 약 28만명으로, 수원-화성-오산권의 2000년 인구 약 124만명의 22.5%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한편, 2005년 이후 인천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서울과 인접하였더라도 안

〈표 3〉 연도별 수도권 내 광역도시통계권별 인구 순유입 규모

단위 : 명

순유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권	20,159	38,097	74,126	82,920	71,497	45,830	36,191	922
인천	10,206	-663	-4,418	-17,449	-2,579	10,947	9,595	23,580
수원-화성-오산권	46,891	39,123	45,653	11,218	23,757	30,405	28,065	52,800
평택-안성권	3,014	2,386	1,896	5,647	2,855	11,456	9,576	4,719
안산-시흥권	27,123	29,480	39,836	25,855	13,615	10,804	13,078	-4,015
이천	594	1,400	-140	-560	-1,679	-506	419	75
동두천	-146	-1,655	-1,491	1,055	3,666	2,436	2,133	2,339

산-시흥권의 경우는 오히려 인구의 순유입에서 최근 순유출로 바뀌었는가 하면 평택-안성권의 경우도 인구 순유입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과 수원-화성-오산권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청권 내 광역도시통계권의 인구 순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권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인구의 순유입에

서 최근 순유출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반면, 천안-아산권의 경우 꾸준한 인구의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반도체 및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과 유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산 광역도시통계권의 경우 2007년 인구 순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혹은 기업도시로서 충청권의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지속

〈표 4〉 연도별 충청권 내 광역도시통계권별 인구 순유입 규모

단위 : 명

순유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전권	143	518	158	926	-1,535	175	-1,480	-3,793
천안-아산권	10,639	4,819	5,210	10,111	39,124	6,328	11,053	10,356
청주-증평권	1,265	1,011	742	1,661	176	-1,059	-303	2,007
충주	-2,819	-2,777	-3,872	-3,135	-2,399	-2,024	-1,287	-201
서산	-2,059	-1,515	-2,972	1,630	-2,205	-548	-232	1,424
제천	-1,695	-2,827	-3,214	-3,228	-2,508	-1,322	-2,298	-1,006
공주	-1,638	-1,809	-1,636	-1,582	-671	-868	-1,253	-1,779
보령	-2,535	-2,359	-2,885	-2,717	-1,667	-891	-734	-167

〈표 5〉 연도별 호남권 내 광역도시통계권별 인구 순유입 규모

단위 : 명

순유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주권	-8,755	-9,638	-10,212	-16,229	-11,544	-12,202	-8,361	-8,160
순천-광양권	-2,538	-2,641	-4,854	-4,992	-2,127	-1,845	-3,300	-1,920
전주-김제권	-3,845	-1,772	-9,949	-9,384	-5,021	-7,031	-4,008	-3,736
익산	-4,031	-1,932	-6,274	-6,357	-3,840	-4,710	-4,251	-2,335
여수	-5,418	-5,390	-5,760	-6,044	-5,935	-4,570	-4,594	-3,271
군산	-4,716	-2,540	-6,058	-4,370	-4,477	-3,081	-3,082	-1,543
목포	-4,340	-3,035	-3,719	-3,835	-3,449	-1,237	-2,074	158
정읍	-228	-355	-12,004	14,689	-21,490	-2,969	-2,610	-1,804
남원	-1,468	-327	-3866	1,155	-5,346	-2,374	-2,157	-1,773

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호남권 내의 광역도시통계권은 광주권, 순천-광양권, 전주-김제권, 익산, 여수, 군산, 목포, 정읍, 남원으로 모두 9개가 있으며, 전 지역에서 인구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권의 인구 순유출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2007년 여전히 8,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나마 호남권의 산업도시라 할 수 있는 전주-김제권이나 순천-광양권에서조차 커다란 규모의 인구 순유출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권에는 〈표 6〉에서와 같이 대구권, 포항, 구미 등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광역도시통계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광역도시통계권이라 할 수 있는 대구권(경산시 포

항)의 경우 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2007년 1만 6,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순유출이 최근 8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대구권은 물론 대경권의 지역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철강 산업도시인 포항 광역도시통계권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의 순유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경권의 전자·정보기기산업이 발달한 구미 광역도시통계권에서는 인구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의 구조 고도화 여부에 따라 인구의 꾸준한 순유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다른 소규모 광역도시통계권들에서는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김천 광역도시통계권의 경우 지리적으로 대구권과 구미 광역도시

〈표 6〉 연도별 대경권 내 광역도시통계권별 인구 순유입 규모

단위 : 명

순유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구권	-9,732	-16,019	-11,501	-11,729	-14,371	-17,727	-18,107	-15,873
포항	-2,174	-3,901	-4,464	-5,387	-3,917	-2,326	-3,381	-2,441
구미	1,041	1,795	1,180	287	4,371	3,344	6,418	1,092
경주	-3,398	-3,966	-3,712	-4,106	-3,736	-3,435	-1,962	-2,138
안동	-3,136	-2,697	-3,256	-3,693	-2,446	-2,783	-2,620	-1,689
김천	-1,922	330	-3,904	2,883	-6,091	-1,636	-1,885	-874
영주	-3,034	-2,906	-2,674	-2,176	-2,292	-2,310	-2,196	-1,952
상주	-2,201	-2,246	-2,404	-2,924	-2,274	-1,709	-1,604	-1,281
영천	-2,439	-1,814	-2,418	-2,653	-2,430	-2,028	-1,998	762
문경	-363	-669	-4933	-2,125	-1,375	-1,064	-1,303	-1,104

통계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의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며 김천 혁신도시의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인구규모 면에서의 성장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된다.

동남권에는 부산권과 울산권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광역도시통계권이 있으며 이들 중 거제 광역도시통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순유

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권은 물론 대표적인 산업도시라 할 수 있는 울산과 창원-마산-진해권, 그리고 진주-사천권에서의 인구 순유출은 동남권의 지역경쟁력 약화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권의 산업기반이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등의 전통적인 주력기반

〈표 7〉 연도별 동남권 내 광역도시통계권별 인구 순유입 규모

단위 : 명

순유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부산권	-26,292	-30,145	-14,410	-24,469	-15,366	-17,149	-23,154	-20,473
창원-마산-진해권	-11,663	-4,882	-13,820	-4,563	-13,717	-8,398	-4,447	-9,907
울산	1,823	4,805	1,364	941	951	-829	-2,564	-869
진주-사천권	-4,124	-4,553	-5,710	-5,609	-5,058	-4,672	-3,218	-2,469
거제	-737	1,812	1,135	2,011	1,911	3,334	3,826	4,373
밀양	-2,255	-1,555	-2,328	-2,232	-1,902	-1,587	-1,207	-384
통영	-2,816	-1,736	-1,671	-964	-763	-467	-142	677

업에 있었고 이제 고부가가치의 지식 기반제조업으로의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서 적절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김동수 외, 2008).⁶⁾

강원권과 제주권의 광역도시통계권 중에서는 원주지역의 인구성장세가 눈에 띄었으며 증가세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서지역에 위치하면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릉 광역도시통계권의 지속적인 인구 순유출은 동해안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주권의 경우도 제주시가 제주 지역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주 광역도시통계권을 거치지 않고 수도권으로 직접 유출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총 50개의 광역도시통계권 중에서 경기도 내 18개의 일반시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권, 논산시와 계룡시를 포함하고 있는 대전권, 나주시를 포함하고 있는 광주권, 경산시를 포함하고 있는 대경권, 그리고 김해시와 양산시를 포함하고 있는 부산권의 인구이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주요 광역도시통계권의 일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서울권의 인구 순유입 규모는 2003년을 기점으로 그 규모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표 8〉 연도별 강원권 및 제주권 내 광역도시통계권별 인구 순유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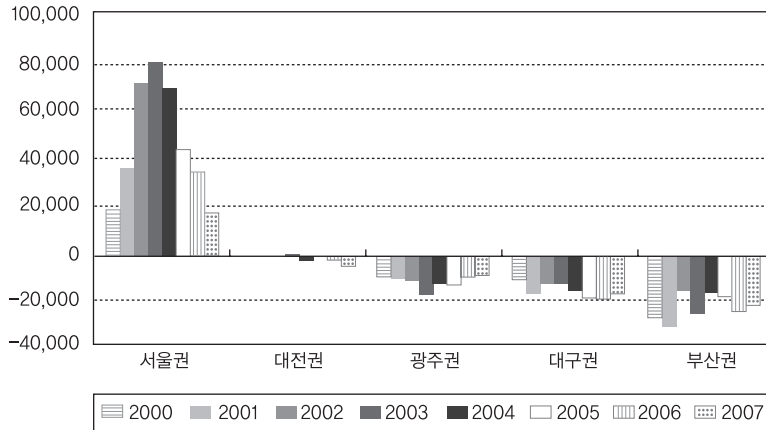
단위 : 명

순유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주	682	1,358	-173	276	842	697	2,158	1,582
춘천	-515	-1,835	-1,671	-1,273	-1,030	-1,487	-535	-309
강릉	-1,153	-2,072	-2,775	-1,934	-2,593	-3,127	-2,823	-2,724
동해	-845	-649	-1,085	-1,506	-1,467	-1,853	-1,964	-1,235
속초	-523	-556	-1,269	-1,568	-1,347	-1,203	-1,359	-1,409
삼척	-2,518	-2,404	-2,236	-1,536	-1,290	-1,049	-1,158	-970
태백	-1,893	-1,050	-1,362	-1,380	-902	-1,017	-1,022	-545
제주	15,966	1,183	1,008	-129	413	395	11	-845
서귀포	-9,582	-1,227	-1,208	-1,427	-339	-1,058	-1,850	-1,872

6) 김동수(2008), “세분화된 경제지리권역의 산업구조 분석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08년 11월호, pp. 27 ~ 42.

〈그림 1〉

주요 광역도시통계권의 인구이동 추이



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이 상대적으로 서울권에 집중되던 것이 수원-화성-오산권, 인천, 천안-아산권 등으로 분산되어 집중되는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4. 결론 : 인구이동 추이 분석에 따른 지역경쟁력 관점의 재해석

앞 장에서는 광역경제권 간 인구이동의 추이 분석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순환 또는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인구이동을 가장 커다란 지역정책의 공간범주라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에서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적자원 교류의 한계이다. 비록 비수도권 간의 인적교류는 활발하지 못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적자원 교류는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출신지역으로의 회귀현상을 감안한다면 이마저도 부풀려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광역경제권의 공간적 범주에서 각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급 인적자원의 유치를 통한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인구의 순수입입을 인정한다면 각 광역경제권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 및 순환을 통한 다양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정책목표와 전략적 정책 선택의 괴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의 공공기관장이나 고위인사를 모집할 때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철저히 지역인사 위주로 기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비수

도권 지역에서 타 지역 출신의 고급
인적자원에 대해 배타적인 인식이 지
배적이라는 것은 고급인적자원 유치
가 최우선시되는 지역정책의 목표에
아이러니하게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나 인구정책보다도 활발한 인적자원

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
환이 중요하며 이것이 무엇보다도 선
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